NEXUSBRIEF

넥서스 브리프 2026_105

NB-2026-105 · 예금·보호 · 발행 2026-11-01 · 자료 기준일 2026-11-01 · 연번 2026_105 · 읽는 시간 6분 · 작성 넥서스 금융경영연구소

신속정리의 3~4일은 절차 생략과 사후 보전을 전제로 합니다

금융회사 신속정리 도입 계획에서 주주·채권자의 사전 절차와 사후 손실보전을 구분합니다

10월 29일 발표는 정리 절차를 줄이는 법률 개정 계획입니다. 예금 인출을 기다리는 시간과 주주·채권자가 처분 전에 의견을 낼 기회가 함께 달라집니다.

연구소의 판단

연구소는 정리 속도와 함께 권리를 확인할 시점이 어떻게 바뀌는지 봅니다. 사전 의견제출·주주 결의 등을 생략하는 대신 파산했을 때보다 불리해진 손실을 사후 보전하는 구조입니다. 정리를 빨리 마쳤다는 사실만으로 권리 보호가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생략 요건, 평가 방법과 보전 절차가 함께 정해져야 합니다.

01 · 확정된 사실

금융위원회는 2026년 10월 29일 금융회사 신속정리제도 도입 추진을 발표했습니다. 자료 기준일인 11월 1일에는 입법예고가 아직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항목	확인된 내용	비고
법적 상태	금산법·예금자보호법 개정 추진	현행 시행제도 아님
예고 계획	2026.11.2~12.14, 42일	금융위 발표
정리 기간	현행 통상 약150일 → 예시 3~4일	보장된 처리기한 아님
대상	예금보험기금 지원이 가능한 금산법상 금융기관	농·수협은행·재보험 등 제외 표기
지정	세 요건 모두 충족·공익상 필요	금융위 재적위원 2/3 이상 찬성
평가·보전	1~2일 잠정평가, 정리 후 정산실사	파산 대비 손실 사후 보전 계획

발표가 제시한 지정 요건은 부실 또는 부실 우려, 금융위기 초래나 시장 안정 저해 우려, 다른 처분으로 막을 수 없는 긴급한 필요입니다. 이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금융위원회 의결로 지정하는 방안입니다.

은행은 농·수협을, 보험은 재보험을 제외한다고 표기했습니다. 증권사·저축은행·금융지주회사도 대상에 포함됐지만, 금산법상 금융기관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대상과 예외는 개정안의 정의·적용 조항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02 · 왜 이런 구조인가

현행 정리에는 계약이전 상대를 선정하는 입찰, 처분 전 통지와 의견청취, 회사의 의사결정과 이해관계자 보호, 기업결합 심사 등이 관계됩니다. 금융위원회가 제시한 통상 약150일은 전체 정리 과정에 대한 설명입니다. 여러 절차는 병행될 수 있으므로 개별 법정기간을 단순히 더해 150일을 재현할 수는 없습니다.

개정 계획은 경쟁입찰을 수의계약으로 바꾸고, 사전통지·의견제출, 이사회·주주총회 결의, 반대주주 주식매수청구·채권자 이의제출, 기업결합 심사 등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합니다. 발표문의 '등'이라는 표현만으로 범위가 무제한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생략 가능한 절차와 요건은 입법예고 조문에서 확인할 사항입니다.

먼저 잠정평가로 계약이전 등 정리조치를 진행한 다음 외부 전문기관의 정산실사로 손실을 따지는 순서입니다. 이해관계자가 일반 파산 때보다 불리해지지 않도록 차액을 보전하는 원칙을 NCWOL이라고 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처분 후 6개월 안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이 보고 기한과 개별 보전금 지급기한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03 · 누가 얼마나 물리는가

영향을 받는 사람은 정리 대상 금융회사의 예금자·보험계약자와 주주·채권자입니다. 인출 정지의 장기화를 줄이는 이익과, 처분 전에 회사 가치나 이전 조건에 의견을 낼 절차의 축소가 서로 다른 집단에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발표는 과거 저축은행 30개사의 부실 규모가 부실 결정 이후 약1.2배로 늘었다는 사례를 들었습니다. 약27조원의 예금보험기금 투입을 고려한 증가분 약3.9조원이라는 설명도 있습니다. 이는 과거 사례의 비용 설명이며 새 제도로 절감될 금액이나 현재 특정 금융회사의 부실을 뜻하지 않습니다.

주주·채권자가 실제로 받을 보전액은 정리 처분 시점의 잠정평가만으로 확정되지 않습니다. 자신이 보유한 주식·채권이 어떤 순위의 권리인지, 파산을 가정한 회수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따라 사후 결과가 달라집니다. 발표문에는 앞으로 이 제도가 적용될 회사 수와 보전 규모가 제시돼 있지 않습니다.

04 · 무엇이 해결되지 않았나

신속정리가 사전 절차를 모두 대신하지는 못합니다

사후 금전 보전은 처분 전에 의견을 내거나 의결하는 기회와 같은 권리가 아닙니다. 예금 인출의 신속한 정상화와 주주·채권자의 절차 보장을 각각 평가해야 합니다.

보전액을 계산할 구체적인 기준은 조문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발표는 정산실사와 차액 보전 방향을 설명합니다. 평가 기준일, 파산가치 산정 방법, 이견이 있을 때의 절차와 지급 시점은 법률안 및 후속 규정에서 확인할 사항입니다.

예고안과 최종 법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1월 2일부터 예정된 입법예고 뒤에는 심사와 국회 입법 절차가 남습니다. 지금 발표된 목표기간과 절차 생략 항목을 확정 법률의 효력으로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05 · 지금 할 일

국민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의 적용 대상과 제외 문구를 확인합니다. 자신의 예금·보험·채권을 같은 권리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가 시작되면 금융위원회 법령정보의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에서 금산법·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확인합니다. 의견 제출을 원하면 게시문에 적힌 방법과 12월14일 예정 마감일을 다시 확인합니다.

대상회사

• 주식·채권·예금·보험의 권리 순위와 이전 조건을 구분해 기록하고, 사전 절차가 생략될 때의 안내·자료 보존 절차를 검토합니다.

당국

• 생략 가능한 절차의 범위와 발동요건, 잠정평가와 정산실사의 차이, 보전 신청·이의 절차를 함께 공개합니다.

• 국회 보고와 별개로 이해관계자가 자신의 평가·보전 결과를 확인할 경로를 제시합니다.

갈림길

절차를 줄인 만큼 사후 권리 확인도 구체화되는가

개정안과 후속 규정에 평가·보전·이의 절차가 어느 수준으로 정해질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A · 보전의 기준과 절차를 함께 정하는 경우

권리자는 파산 대비 회수액과 보전 산식을 확인하고 결과에 이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처리 속도와 사후 검증을 함께 평가할 수 있습니다.

B · 정리 권한 중심으로 규정하는 경우

정리 자체는 빨라져도 평가자료와 보전 결과를 확인하는 부담이 이해관계자에게 남을 수 있습니다.

확인 신호: 금융위원회 입법예고안의 절차 특례·손실보전 조항, 국회 제출 법률안과 후속 평가 규정을 확인합니다.

함께 읽을 것

금융제도 · 부실 금융회사 정리제도

금융제도 · 예금자보호

넥서스 리서치 · 계약이전은 보장을 잇고 파산은 돈만 남긴다

근거와 검증

01 · 1차 · 입법예고 계획·대상·지정 요건·의결 기준

금융위원회「금융회사 신속정리제도 도입 추진」· 2026-10-29 · 방안 표·향후계획 · 확인 2026-11-01

https://www.fsc.go.kr/no010101/88020

02 · 1차 · 통상 약150일과 예시3~4일, 생략 대상 절차

금융위원회 같은 발표 · 2026-10-29 · 현행 제도·신속성 확보 · 확인 2026-11-01

https://www.fsc.go.kr/no010101/88020

03 · 1차 · 잠정평가·사후 정산실사·NCWOL·국회 보고

금융위원회 같은 발표 · 2026-10-29 · 재산권 보호방안 · 확인 2026-11-01

https://www.fsc.go.kr/no010101/88020

04 · 1차 · 과거 저축은행30개사 부실 증가 사례

금융위원회 같은 발표 · 2026-10-29 · 현행 제도의 한계 각주 · 확인 2026-11-01

https://www.fsc.go.kr/no010101/88020

추적 예정

2026년 11월2일 입법예고 시작 및 12월14일 예정 종료 뒤 법률안의 생략 범위·손실보전·이의 절차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확인합니다.

정정 이력

2026년 11월1일 최초 게시. 정정 없음.

면책 고지

이 글은 넥서스 금융경영연구소의 분석과 견해이며, 감독기관이나 금융회사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특정 금융상품의 매매·가입·해지를 권유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세무·투자 자문이 아닙니다. 정책의 추진 계획과 현재 시행 중인 규칙을 구분해 읽고, 실제 계약과 권리 행사에 앞서 최신 공식 문서와 개별 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작성: 넥서스 금융경영연구소